1인당 개인소득 전남은 전국 꼴찌 광주는 광역시중 최저

〈1594만원

(1734만원

전남 5년째 최하위…서울과 500만원 차 지역 총생산 증가율도 전국 최하위권 1인당 소비 광주 1612·전남 1411만원

지난해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였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공개한 '2017년 지역소득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2143만원)이었다. 개인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 득을 말한다.

전남의 작년 1인당 개인소득은 1594만원으로 서울과 무려 5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특히,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통계청이 자료를 공개한 2013년 이후 줄곧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3년엔 1349만원, 2014년 1383만원, 2015년 1470만원, 2016년 149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의 작년 1인당 개인소득은 1734만원으로 전남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소득인 1845만원보다 100만원이 적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개인소득(실질) 증가율을 보면 충남이 6.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4%, 강원이 4.7%로 뒤를 이었다. 울산이 0.0%로 가장 낮았고 이어 대구(1.4%), 서울(1.7%) 순이었다.

지난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은 1732조원으로 전년보다 85조원(5.2%) 늘었다. 지역총소득은 경기가 43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7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9

조6000억원, 전남은 59조원이었다. 제주가 19조 원으로 가장 작았다.

지난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명목)은 1732조원으로 전년보다 90조원(5.5%)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14조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372조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18조원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은 경기(11.0%), 충북 (8.2%), 충남(6.3%)이 높았고 경남(0.9%), 대구(2.1%), 부산(2.5%)은 낮았다.

시도 전체의 명목 최종소비지출은 1099조원으로 전년보다 50조원(4.7%) 증가했으며 실질 최종소비지출은 2.8% 늘었다.

실질 민간소비는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으며 전국 평균 2.6% 증가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은 3366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울산(6441만원), 가장 낮은 곳은 대구(2060만원)였다. 광주는 2357만원, 전남은 3967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평균 162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2021만원), 가장 낮은 곳은 충남(1405만원)이었다. 광주는 1612만원, 전남 은 1411만원이었다.

16개 시도 전체의 설비투자(실질)는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충남(46.1%), 충북(23.4%), 경남(21.1%)에서 큰 폭으로 늘었고 전남(-1.9%), 부산(-0.5%), 인천(0.1%)에서 는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미미했다.

16개 시도 전체의 건설투자(실질)는 2016년보 다 6.1% 증가했다.

울산(26.7%),경기(14.3%),제주(13.9%)는 대폭 늘고 대구(-14.7%), 광주(-6.0%), 전남 (-3.4%)은 줄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전 '어서와 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막한 '청와대x아티스트 콜라보전 어서와 봄'을 찾아 조윤진 작가가 박스테이프를 이용해 제작한 '올해의 인물'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김태우 수사관 폭로 조목조목 반박 조국수석 정면돌파의지 밝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으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제기된 의혹 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는 등 돌파구 마련에 힘 을 쏟고 있다. 일부에서 '과잉대응을 한다'는 지적 도 나오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김 수사관이 최근 한 매체와 통화에서 "현

역 A 장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일일보고서에 써서 보고했다"며 이 일이 자신이 징계를 받은 원인 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일일보고는 그야말로 근태관리 차 원에서 받는 것이며 거기 적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조 수석이 올린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 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 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 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 사에 담긴 문구다. 이같은 글귀를 다시 인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조 수석의 의지를 반영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1인당 진료비는 전국평균보다 많아

각각 168만원·210만원···60세 이상 진료비 47%·61%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1인당 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 지역 보건·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 1인 당 진료비는 168만원, 전남은 210만원이었다. 두 곳 모두 전국 평균인 158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은 전국평균보다 무려 33%나 많았다. 고흥이 28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270만원), 영광(267만원) 순이었 다. 가장 적은 지역은 광양(142만원)이었다.

1인당 본인 부담금은 광주 38만원, 전남 46만 원으로 전국 평균(36만원)보다 역시 많았다.

주요 4종 암 질환(위암·대장암·간암·폐암) 진료 인원은 광주는 위암이 4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3548명), 폐암(2488명), 간암(1927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간암 859만원, 폐암 820만원, 대장암 635만원, 위암 394만원이었다. 전남 진료 인원도 위암(7647명), 대장암(6174명), 폐암(5192명), 간암(4863명) 순

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폐암이 738만원으로가 장 많았고 간암 730만원, 대장암 590만원, 위암 350만원이었다.

4종 만성질환(치주질환·관절염·당뇨·고혈압) 진료 인원은 광주는 치주질환(60만명), 관절염 (16만명), 고혈압(14만명), 당뇨(7만명) 순이었 다. 1인당 진료비는 당뇨 85만원, 고혈압 56만 원, 관절염 42만원, 치주질환 19만원이었다.

전남도 치주질환이 7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절염(35만명), 고혈압(28만명), 당뇨(14만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당뇨 85만원, 고혈압 53만원, 관절염 46만원, 치주질환 22만명이었다.

광주 요양병원은 61개로 10년 전인 2007년 16 개에 비해 45개(281.3%) 늘었고, 전남은 53개 (189.3%) 증가해 81개였다.

광주 전체 진료비는 2조3402억원, 전남 3조 8405억원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진료비가 광주 47%, 전남 61.2%를 차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문대통령 지지율 집권 20개월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 앞질러

갤럽 여론조사…호남 '부정' 10% 늘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취임 후 처음 발 생한 가운데 호남 지역의 부정평가도 점차 확산하 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sim20$ 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m3.1\%$ 포인트·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긍정 평가는 45% 그리고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9%·47% 이하 긍정·부정)과 호남(65%·28%)에서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의 경우,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치 이면에는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지난주 18%이던 부정 평가 비율이 28%로 10% 포인트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당장, 호남 민심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은 결집력이 강하다는 점에 서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 현상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대구·경북(29%·58%), 부산·울산·경남(42%·48%), 인천·경기(46%·47%), 충청(37%·44%)에선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36%·56%)와 60대(32%·57%)에서 부정 평가가우세했고 20대(53%·35%), 30대(63%·30%), 40대(50%·44%)에선 긍정 평가가더 높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긍정평가 비율과 10%포인트 이 상의 차이를 유지하며 40% 아래로 유지되던 부정 평가 비율이 상승한 데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불 만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데드크로스에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재역 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지율 데 드크로스가 발행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다시 골든 크로스(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를 기 록한 적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 흐름을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바 꾸는 데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일이 지난해 5월 1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데드크로스 상황을 맞은 것은 집권 20개월 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7개월째데드크로스가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 2분기 때 광우병 사태로 데드크로스를 맞았지만 2년차 4분기 때 골든크로스로 만회했다. 그러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